

한국사회의 경제위기와 대안적 발전방향

이 상 철*

목	차
I. 경제위기와 한국사회의 성찰	IV. 결 론
II. 경제위기의 원인	참고문헌
III. 경제위기의 극복과 대안적 발전 방향	

I. 경제위기와 한국사회의 성찰

한국사회 최근의 경제위기는 한 시대를 되돌아볼 기회이다. '60년대 이래의 개발경제체제를 검토하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야 할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이 기회와 계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한국사회는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다. 위기에 임기응변으로 대하거나 대중요법만 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중첩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이고 시급한 문제에만 매달리다간 중장기적인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응 모습은 기대 밖이다. 눈앞의 외환위기만 해결한 상태인데도 또 다시 선부르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경제의 기본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고 있다. 1999년 7월의 대우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IMF체제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사태를 두고 제2의 IMF사태 운운하는 것은 IMF사태가 끝났다는 것을 전제한 넌센스이다.

우리는 IMF사태의 발생과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IMF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발전방향이 전제될 때에만 현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와 그 극복방안에 대해 총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I. 경제위기의 원인

경제위기는 1997년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위기가 한국에 파급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경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기초가 되고, 한보·기아 사태를 처리하는 정부의 미흡한 방식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실망한 해외자본이 급격하게 이탈하자 외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곧 전면적 위기로 확대된 것이다.

위기는 자세히 보면 이러한 현상적 이유 외에 더욱 많은 요인들이 겹쳐서 일어난 것이었다. 한 국가로서 한국사회와 한국 자본주의의 상황적·국면적·구조적 성격과 문제점이 한국을 둘러싼 아시아와 세계체제의 상황적·국면적·구조적 성격 및 문제점들과 얽혀져서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수준과 차원이 상이한 여러 요인들은 지역적으로는 내외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내적 요인

위기를 초래한 한국사회 내부적 요인 중 단기적인 것으로서는 외환통제 부족과 이를 유발한 김영삼 정권의 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었던 강경식이 위기 조짐에 시장주의적으로 대응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때문에 해외자본이 대거 철수한 것이다. 여기에는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과 정경유착, 그리고 정권의 무능 등이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는 금융시장을 너무 일찍 개방하여 정부가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와 통제력을 상실한 것에 기반한다. 당시는 종합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재벌은 과잉투자와 비생산적 투자를 일삼고 있었다. 한보·기아 사태의 해결은 지연되고, 해외의 신뢰는 상실되었다. 그 결과 해외자본이 철수함으로써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졌다. 기업의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 비생산적 축재, 금융기제 낙후 등 거품현상이 터진 것이었다(장상환, 1998a: 103-110; Krugman, 1998; Radelet and Sachs, 1997: 46-48).

거품현상이 터지자 금융부문이 문제이지 실물경제는 괜찮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사부문의 금융체계가 취약한 게 문제이므로 공부문의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중남미와는 다르다는 것이다(Rohwer, 1998: 84-86). 이 견해는 한국의 저시경제, 즉 물가상승률·실업률·재정적자율 등이 중남미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점에서는 옳지만, 다른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중장기적 요인으로는 한국 경제체제, 한국자본주의, 한국의 발전모델, 아시아 발전모델 자체의 결함을 들 수 있다. 개발경제체제에서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되어, 노동은 배제한 채, 수출지향적 산업화와 자본축적을 해왔다. 그 결과 급속한 산업화와 성장은 이루었으나, 정경유착·관치금융·재벌총수 일인지배·권위주의·비민주성 등 이른바 천민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폐해가 두드러졌다.¹⁾

개발경제체제는 초기 산업화단계에서 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나름대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되어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기득권이 고착되면서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위기는 천민 자본주의라는 부정적 측면이 폭발한 것이다. 기업은 정치권에 정치자금 등 뇌물을 주면서 로비를 하고, 정치권은 기업을 위해 재정상 특혜를 주고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압력과 뇌물을 받은 금융기관은 기업에 부실 대출을 했다. 이와 같은 기업·정부·금융의 연계, 즉 정경유착·관치금융의 구조 때문에 재벌의 부도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가신인도 추락과 외환위기로 귀결되었다(강철규, 1998: 184-188; 정운찬, 1998: 71-75; Cumings, 1998: 16-17).

위기가 발생하자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재발되었다(김석근, 1999: 157-168). 위기 이전에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이관유 전수상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전자는 민주주의 가치, 특히 영미의 개인주의·탈규제·민영화 등의 가치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후자는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 나름의 문화가 있는 만큼 서구의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고 국가가 경제를 이끄는 권위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아시아에도 민주주의 지향적인 철학과 전통이 있으며 현재는 권위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지향할 때라고 보았다(Kim, 1994).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은 이것이 천민 자본주의에서 보듯 아시아적 가치 때문이라며 시장을 절대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준을 보편적인 것으로 강요하고자 하였다.²⁾

- 1) 크로니 캐피탈리즘(Crony Capitalism)은 글자대로 번역하면 연고·정실·패거리 자본주의가 된다. 이것은 서구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자본의 비민주적, 전근대적, 비합리적 측면을 비난해서 붙인 것이다. 그러나 글자대로 하면 대외적 종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우리의 경우 천민 자본주의라 부르는 게 나을 듯 하다.
- 2) 그렇지만 동아시아에는 아시아적 가치로 단죄할 수 없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아시아 발전모델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고, 국가가 경제를 이끌며,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것을 아시아적 가치라 하더라도 이 모델에 들어맞는 곳은 일본·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유교를 문화적 배경으로 갖고 있다면,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은 그렇지 않다. 둘째, 유교권에서 위기에 처한 곳은 한국뿐이다. 셋째, 아시아가 아니면서 위기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중남미·동구·러시아 등도

그렇지만 부정과 부패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덜 발전된 사회 어디에서나 있으므로 이를 아시아적 가치 탓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위기는 미국의 압력과 OECD 가입조건으로 금융시장을 너무 일찍 개방하여 국가가 외환거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천민 자본주의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므로 무조건적인 탈규제보다는 국가가 효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다. 이점들을 고려하면 문제는 가치가 아니라 아시아 발전모델의 시효만료이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이데올로기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시효가 만료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시아 국가의 내부 모순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 경제환경이 급변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개발경제 이후 축적전략의 기초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본과 국가가 연합하여 수출 주도로 발전하는 기제에서 요소의 투입 증대에 의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기술부족으로 인해 생산성 증대가 낮은 것은 단위요소의 산출량 증대에 기초한 내포적 성장이 필요함을 뜻한다. 자원동원 위주에서 기술 발전 위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Krugman, 1994).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가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요소의 투입증대, 수출지향, 차입경영 패턴은 과잉생산 문제도 발생시켰다. 저임금에 기초한 발전으로 내수는 부족하고, 선진국 진입에는 장벽이 있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국의 추적으로 수출은 한계를 맞았다. 개발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에 의한 민주화 요구와 정치사회적 저항도 두드러졌다(정장연, 1992: 363-371). 발전 초기엔 나름대로 순기능을 했던 모델이 이제 와서는 질적 전환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아시아적 가치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넷째, 베버의 전통에 따라 유교 때문에 자본주의가 꽃피지 못했다고 했다가, 1980년대에는 유교로 대표되는 아시아적 가치 때문에 급속히 성장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아시아적 가치 때문에 위기를 겪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유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문화로만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문화가 경제발전과 관련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일한 문화라도 경제발전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다 끼칠 수 있다. 그것은 문화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요인들과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3) 아시아 발전모델은 한마디로 앞에서 논한 것처럼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개인보다 집단 우선주의, 수출지향적 산업화 등을 통해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조희연, 1997). 그런데 선발국 영미의 자생적 성장과 달리, 독일·일본의 경우처럼 후발국에서는 국가가 개발을 지도하고 자원의 집중과 배분을 관리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아시아 발전모델은 일반적인 후발국 발전전략의 냉전시절 동아시아 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증시를 통해 자본 조달을 하는 서구와는 달리 은행차입을 통하는 게 지배적이었다. 높은 가계저축이 은행을 거쳐 기업으로 순환되고, 산업전략과 자원의 배분을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면서 고도성장을 달성해왔던 것이다(Wade and Veneroso, 1998a: 91-93). 그러나 기업의 고부채, 기업-은행-정부의 연계망 패턴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천민 자본주의도 이 모델의 부정적 측면을 지칭한 것이다.

기술문제, 시민사회 성장 등은 기존 전략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발전모델-개발독재체제 또는 박정희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초되었다. 1979년 신군부 쿠데타, 1987년 항쟁과 노태우 정권 성립, 김영삼 정권하의 개혁시도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격이 연속되었다. 그 결과 한국 발전모델의 부정적 측면들이 세계경제의 급변에 의해 증폭됨으로써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요컨대 현 위기는 지연된 전환이 야기한 위기이다(손호철, 1998: 21-23).

장기적으로 보면, 위기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조선후기 근대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좌절되고, 식민지로 전락하고, 해방과 함께 분단을 겪고,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민족적인 수구세력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만큼 자율적 발전은 험난했고 세계체제의 주변부를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2. 외적 요인

위기를 초래한 외부적 요인 중 단기적인 것으로는 초국적금융자본, 미국의 월가-재무부-IMF 복합체(Complex)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위기는 신인도가 하락하자 초국적금융자본, 특히 투기자본이 대거 철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거품이 꺼지면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외환보유고는 급감하였다. 투기자본은 자본의 과잉축적을 기반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고이윤을 추구하는 운동방식을 취함으로써 최근 세계경제 혼란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양태가 도박적이라 해서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라고도 부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기관들, 그 중에서도 헤지 펀드(Hedge Fund)는 그 대표적 존재이다(이주희, 1998: 62-65).

초국적금융자본이 철수하자 한국에는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졌다. 미국은 이에 신용공여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화로 그동안 한국에 요구해 왔던 경제구조의 변화를 강요함으로써 음모론이 나오게 되었다. 요구내용은 무역장벽 완화, 한국기업 인수·적대적 합병·금융산업에의 직접투자 등 자본시장 개방 등이다. 한마디로 국가 주도 경제체제를 미국식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긴급지원에 나서는 것을 미국 재무부가 저지한 것은 이런 의혹을 더욱 정당하게 한다. 요컨대 월가의 입장을 재무부가 나서서 IMF를 통해 관철시켰다고 하겠다(Bello, 1998b: 224-227; Wade and Veneroso, 1998a)⁴⁾. 위기가 미국 패권주의 또는 제국주의 침탈 탓이라는 게 빈말은 아니다.

4)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명사인 네이더 등(Nader and Weissman, 1998)도 재무부가 미국 국민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표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논하면서 채무국 한국에는 위기를 빌미로 가혹한 조건을 강요하고 대부자인 월가에는 큰 혜택을 베푸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냐고 따지고 있다. 채권국과 대부자의 도덕적 해이도 같이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박복영, 1998: 135). 구제금융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루빈(Rubin) 재무부장관이 월가 출신임을 감안하면 음모론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월가-재무부·국무부-IMF·세계은행 사이에 그 지도자들이 인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장기적 요인으로는 첫째 냉전 종식, 둘째 세계화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WTO체제 등장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축적조건이 변화한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에 대해 보호와 우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냉전 시 한국·일본·대만·홍콩·필리핀·태국·싱가포르 등은 자본주의 진영의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위성으로서 미국 시장에서의 접근이 쉬웠다. 한국과 대만은 초기에 원조도 많이 받았다. 미국은 이들이 신중상주의적인 수출지향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는 것도 용인하고 낮은 가격에 기술이전도 가능하게 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의 위기에는, 1997년과는 반대로,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해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게 했다. 대신 미국은 반공정책과 군사기지에서 득을 얻었다.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상대적인 특혜를 없애고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펼쳤다(Johnson, 1998: 18-19). '90년대 들어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경제의 지배력은 더욱 절대적이 되었다. 미국이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즉 세계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는 아시아에도 미국 기업과 금융의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었다(Rohwer, 1997).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에서 적자로 급변하였다. 동아시아에는 1989년 이후의 동구처럼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요컨대 냉전이 없었다면 미국은 이미 수십년 전에 동아시아 경제를 개방하고 시장주도형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세계화는 자본주의 초기부터의 현상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상품자본이나 산업자본보다 금융자본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의 세계화 속도와 규모 및 결과적인 영향력은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김재훈, 1998: 10-20; Piven, 1995: 108-112). 자본시장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증대한 반면 안전장치는 아직 결여되어, 한 국가의 위기가 바로 다른 국가들로 파급되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한국이 금융시장을 조기 개방하고 OECD에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과시욕 탓이지만 세계화에 기초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공세 때문이기도 하다.⁵⁾ 노동은 제외한 채 모든 자본의 이동에 대한 국가간 제약을 철폐하고 시장기제에 맡기려는 것은 자본의 자유 보장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가 이렇게 신자유주의와 WTO체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점들은 달리 표현하면, 한국경제의 환경인 세계의 경제구조와 축적조건이 변화하였

5) 신자유주의 공세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서 공식화된 바 있다. 합의는 경제에서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 노동을 제외한 상품·서비스·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 두 가지에 기초하였다. 1980년대 미국과 일부 유럽에서 케인즈주의의 하락과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경제학의 득세를 반영한 것이다(Wade, 1996: 5). 아시아에서 보면 합의는 일본으로 대표되는 신중상주의적 발전국가에 대한 공세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국은 개발이래 30여 년간 경제를 총괄해온 경제기획원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 후에야 OECD에 받아들여졌다.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과거 개발경제 시대의 낡은 경제운용 방식으로 이에 대응함으로써 적응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한 축적조건에 불변인 축적전략을 취함으로써 지연된 전환이 야기한 전환의 위기인 것이다(박사명, 1998: 244-248).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태국 등 동아시아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국가나 아시아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다. 이들이 몸담고 있는 세계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모순이 세계화된 것이다. 세계자본주의체제가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으로 공황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임영일, 1998: 3-4). 위기는 과잉축적된 선진국의 (금융)자본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단기간에 과잉 자금공급을 한 탓이 크다. 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성장속도가 느려 금리가 낮아 투자 매력이 결여된 반면, 동아시아는 당시 성장속도가 세계 최고여서 투자가 급증하였다(IMF, 1998). 산업의 과잉투자는 과잉생산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반도체·조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수출이 힘들어졌다. 한국·일본·중국·태국 등 수출지향적인 동아시아의 요구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이 다 수용할 수는 없었다. 수요 부족과 불황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초국적 투기자본도 자본의 과잉축적 결과 금융자본이 실물경제와 유리되어 나타난 것이다. 과잉유동성이 형성된 것이다. 현재 세계에는 이 투기자본의 운동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하나도 없다.

III. 경제위기의 극복과 대안적 발전방향

위기에 대한 처방은 그 원인에 조응해서 나와야 한다. 위기가 내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면 처방도 내외적 요소가 결합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개혁뿐만 아니라 채권국과 국제기구의 개혁도 동시에 요구된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또 위기가 단기 및 중장기의 요인을 갖고 있다면 처방도 단기와 중장기가 결합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해결방안이 현 상황 타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세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도 연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 내적 처방

내적 처방 중 단기적인 것으로서는 첫째 IMF의 처방, 둘째 금융과 재벌체제에 대한 개혁 정책을 들 수 있다.

IMF는 증납미와 동구에 요구했던 처방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긴축을 위한 안정화 프로그램과 자유화를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그것이다(Chossudovsky, 1997: 제2장).

구체적으로 긴축재정, 금리인상,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및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따라 한국 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IMF, 1998).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상황이 심각하고 대통령 선거도 겹쳐 IMF의 조건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지급유예에 따른 국가부도 사태를 피하려면 IMF의 요구를 어느 정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연명을 우선하더라도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본이동을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외환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체계를 고쳐 안정시켜야 한다. 관치금융과 재벌의 대출독점 관행을 우선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정경유착과 부실의 대명사인 재벌에 대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재벌은 '60년대 이래 개발경제의 최대 수혜자이자 개혁을 저지하는 수구세력의 대표이다. 재벌에게 한국사회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으므로 재벌개혁 없이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재벌체제의 특징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에서도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는 데 있다(공제욱, 1998: 77). 그러므로 경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위해서도 재벌개혁은 불가피하다. 조치는 차입의존적 경영·상호지급보증·상호출자·내부거래·총수 독단경영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자본 합리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다. 과거와 같이 재벌이 시간을 끌면서 버티거나 현대처럼 인수합병으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는 지금 아예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즉벌경영을 막고 노동자의 참여를 실시해야 한다. 선단식 경영이 아니라 전문대기업체제(업종전문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안적 소유방식 등도 다각도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김상조, 1998: 137-141; 장상환, 1998b; 정상호, 1998).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효율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정부의 개입 때문이 아니다. 김영삼 정권의 선부른 세계화와 시장주의가 위기를 심화시켰다. 정부의 개입과 감독이 갑자기 급감해서 한국의 경제체제가 변화된 환경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탓이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국가가 개입해서 육성해왔다. 근대자본주의국가는 시장경제의 발달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왔다(Fligstein, 1996: 660-661). 그러나 개입은 과거와는 달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치도 변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깨끗해야만 자본의 보다 효율적인 동반자로 기여할 수 있다(Bello, 1998a: 19-20).⁶⁾

6) 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특히 한국에서 중요한 사항은 군축의 필요성이다. 군축은 위기상황 하에 있는 현재의 부족한 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중장기적 처방은 박정희 모델을 넘어서 변화한 축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국 발전모델을 넘기 위해선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와는 달리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적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혁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과거처럼 직접 자본을 창출·육성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시장기제를 과도하게 왜곡하거나 정경유착은 피해야 한다. 비효율적이어서도 안 된다. 시장근본주의나 아시아 발전 모델 모두의 한계를 넘고 변화한 축적 조건에도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시장기제에 기반을 두면서도 시장에만 방임하지는 않는 체제,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되 시장의 실패 또한 간과하지 않는 체제, 상이한 이해관계에 있는 계급계층간에 협의에 의한 이해 조정과 타협이 가능한 체제를 도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통도 어느 한 쪽에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수출의 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세계시장의 변동에 덜 휘둘리도록 해야 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회정의도 확대하는 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의 동원은 계급간 타협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협약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노동배제에서 노동포섭과 노동참여로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해야 한다. 그동안의 폐쇄적인 국가-재벌의 연합을 넘어 새 협의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강명세, 1998: 81-90). 그러기 위해선 국가가 시민사회의 성장을 억압한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를 적극적인 동반자로 간주해야 한다.” 경제와 정치과정에서 국가 또는 시장만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다. 이들과 함께 시민사회 내의 구성원인 시민단체·노동조합·지역사회단체 등 NGO들도 공동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Bello, 1998b: 236-237). 쉽지 않지만 이것이 월가나 재벌 위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또 다른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요컨대 개발보다 더 힘들 수 있는 박정희 모델을 넘는 질적 전환과제는 경제개혁, 부패척결, 정치사회적 참여증대, 환경친화적 정책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자들을 포섭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치와 민주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Koppel, 1998).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처방은 한국 근현대사를 새로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7) 그러나 현실은 이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강조와는 달리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하는 형국이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현금으로 주고 어음으로 받았다’는 피해의식이 강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은 수사(rhetoric)에 그치고, 이 수사 때문에 노동자들은 오히려 발목이 잡히고, 여론도 이들에게 비우호적이 되고 있다. 실재를 호도하고 실행을 저해하는 구호정치는 이제 탈피해야 한다.

민족적이면서 민주적인 주체가 한국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남북한간 평화적 공존과 사회경제적 통합을 거쳐 통일을 달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럴 때 한국은 주변부를 탈피할 수 있으며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선보일 수 있다.

2. 외적 처방

단기적 처방은 IMF와 재협상, 투기자본 규제, 국제연대 강화 등이다.

먼저 개별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IMF와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IMF의 구제금융이 트로이의 목마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IMF의 요구를 따르지 않기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너무 악조건을 수락한 셈이다. 말레이시아처럼 IMF, 그리고 뒤에서 이를 조종하는 미국과 정면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해 IMF와의 재협상을 요구해야만 했다. 사실 IMF의 프로그램이 지나친 데다가 아시아의 상황이 중남미나 동구와 다른 것을 무시한 처사라 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심하게 일어났다.⁸⁾ 그후 상황전개에 따라 구체적 지표가 조금씩 수정되기는 했지만 기본 조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자본이동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초국적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 주가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매겨야 한다. 자본 유출입에 토빈세 같은 거래세를 도입하거나, 칠레처럼 외환가변예치제나 말레이시아처럼 본격적인 자본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생산적 부문에의 직접투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의 운동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Greider, 1997: ch. 14).

아시아 국가간 연대로써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에 나서 IMF와 미국에의 의존과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있다. 사실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1997년 8월

8) 위기를 천민 자본주의 탓이라고 비판하는 미국 우파도 대응방안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첫째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붕괴는 서구경제의 침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오판을 한 투자자를 구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과정을 간섭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는 시장근본주의 입장이다. 셋째는 구제를 해야하지만 IMF의 엄격한 처사는 채무국에게 득보다 해가 크다는 의견이다. 미국 재무부가 첫째 입장에 해당된다. 미국 공화당 내에 둘째 입장을 가진 자들이 많다. 펠드스타인(Feldstein, 1998), 크루그먼(Krugman), 삭스(Sachs, 1998) 등은 셋째 입장에서 IMF의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이나 아시아는 경제의 기본구조가 아니라 단기 유동성 부족과 금융체제 등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남미나 동구와는 다른 처방을 써야한다는 것에서부터 IMF는 해당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등이 그 이유이다. 좌파는 구제금융이 월가만 이롭게 하고, 아시아 노동자들은 구제금융의 엄격한 조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구제를 하더라도 독재국가의 인권과 노동자 권리 향상을 조건부로 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를 비판하여 지급유예를 선언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Wade and Veneroso, 1998a: 97-98).

일본이 AMF 창설을 주도하고 아시아 국가들에 독자적인 지원을 하려 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반대는 AMF 창설이 IMF와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AMF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IMF와 반미노선을 걷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를 앞세워 일본의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다만 아시아 맹주를 놓고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⁹⁾ 우리는 IMF와 미국의 독주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지만 일본의 영향력 강화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의 지원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¹⁰⁾ AMF와 아시아 연대 방법은 비달러 결제체제를 수립하고, ASEAN·EAEC 등 역내기구나 국가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도진순, 1998: 128).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시장의 대폭적인 개방도 요구된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되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의 수출이 제한된 것도 위기의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김용복, 1998: 108-112). 그동안 동아시아의 급성장도 1985년 플라자 협정에 의해 엔화 강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엔 강세로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일본이 생산거점을 동아시아로 옮긴 덕을 본 것이다. 최근 위기에는 일본의 책임도 있다(송주명, 1998: 70-72).¹¹⁾

아시아의 범위를 넘어 연대하는 방법은 채무국 연대를 꼽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지급유예를 선언한 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기존의 국제 금융 무역질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재검토와 평가도 요청할 수 있다.

선진국, 예컨대 G7의 정부가 당장 취해야 할 금융과제는 금리 인하, IMF 기능 조정,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완화, 개발도상국의 자본이동 통제 허용, 최빈국에 대한 외채 탕감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채무국과 국제기구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 9) 일본 독주를 염려해서 중국이 AMF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에게 일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보장해 준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IMF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인근국가에 국제금융을 제공하고 중국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음으로써 아시아 국가의 수출을 도와주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타자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는 기회주의적인 미국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Bello, 1998b: 245-246).
- 10) 유일한 세계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달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의 유러(Euro)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엔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북미, 유럽의 블록화에 대응해 일본이 아시아의 블록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1998년 10월 일본은 '신 미야자와 플랜'을 세워 아시아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그 규모는 앞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 11) 그러나 일본시장 개방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진입에는 제도외적 장벽도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도 현재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아시아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기왕의 발전 패턴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과거에는 장점이 되었던 많은 요인들이 조건과 환경이 바뀌고 일본이 세계의 최선두에 나서야 할 시점에서는 오히려 개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Crawford, 1998; Smith, 1997).

중장기적 처방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자본을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이다. 세계화가 국경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는 정부기간, 비정부기간뿐만 아니라 UN·ILO 등 국제기구 간에도 필요하다.

통제는 단기 투기성 자본뿐만 아니라 자본 일반에도 필요하다. 자본 자유화 흐름이 거센 만큼 자본과 세계경제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증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아시아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자본 자유화를 주장하지만, 많은 이들은 자유화가 바로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현 시기는 그 전환점에 해당한다(Wade and Veneroso, 1998b).

자본통제는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비정부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의 세계화는 이에 대한 민중 운동과 조직의 세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중이 자본 세계화의 대척점에 존재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항과 이를 위한 연대가 세계화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자본의 운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IMF 신탁통치는 국제금융자본만 살찌우고 빈곤을 세계화시킬 뿐이다(Chossudovsky, 1997). 이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구호가 '생각과 행동 모두 지역적인 동시에 세계적으로'가 되어야 한다(Karlner, 1999). 운동의 세계화가 자본의 세계화보다 힘들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90년대 후반 국제 금융위기 이후 진행 중인 지식인이나 민중의 국제연대운동은 그 단초라 할 수 있다.¹²⁾ 수단은 인터넷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재구조화, 경제의 세계화에 대해 노동도 이제는 재구조화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의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노동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내·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럴 때만 국경을 넘어 전방위로 힘을 행사하는 자본에 대응할 수 있다.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에게는 국내적 힘을 결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초국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강신준, 1998: 39-41). 노동자가

12) 자본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비정부조직과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아탁(ATTAC), 주빌리(Jubilee) 2000, 사프린, 지구적 민중운동(PGA), 세계민중포럼, 아시아회의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경북대 김영호 교수가 주도하는 대구라운드를 꼽을 수 있다. 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주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개별 국가로부터 박탈하려는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1998년 가을 일단 실패하고, 1999년 G7 정상회담에서 외채 710억 달러를 삭감한 것도 이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그렇지만 채권국에서는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한 또 다른 협상인 밀레니엄라운드를 1999년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이 때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민중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 타협에 의한 협의모델도 노동자의 힘이 뒤를 받쳐주어야 가능하다. 타협을 위해서도 힘이 있어야 한다. 1987년 이후 세계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한국의 노동운동도 결국은 협상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임영일, 1997)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빈국의 임금 수준도 제고하여 세계경제에서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자본주의(시장)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Greider, 1997: ch. 18). 과잉축적과 과잉생산,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 자신의 내적 토대를 잠식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립자는 소유와 이윤에만 배타적으로 기초한 자본주의 그 자체라고 할 정도이다. 시장근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자본주의를 살리고 민주주의도 확립하는 길은 시장(자본, 경제)과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룰 때이다.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넘어서는 길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삼자간 정립이 성립될 때이다. 사적 이익지향이 공적 이익지향과 조화를 이룰 때, 개인주의가 연대주의와 짝을 이룰 때, 시장과 국가를 넘어 사회가 성립될 수 있다. 이처럼 경쟁의 한계를 넘어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이 환경과도 더불어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패러다임은 달성된다. 세계적 차원의 운동으로 세계질서의 재편을 모색해야 한다(Wallerstein et al., 1989).

IV. 결 론: 현 상황과 과제

1. 현 상황

현재 한국은 외환위기만 극복한 상태이다. 우리는 외환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근본적·구조적 처방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¹³⁾ 다른 위기가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MF 처방에 따른 결과 급속하게 빈부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간층 붕괴현상이 나

13) 김대중 정권은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신자유주의 강화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제3의 길' '생산적 복지' 등은 김영삼 정권 때의 '신한국' '세계화' 등 구호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상기시켜준다. 현 정권은 구 정권의 못 다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IMF가 제시한 방향으로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타나고 있다(김석준, 1999: 19-23).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완하거나 완화시켜줄 장치나 전체 세력이 약화됨으로써 계급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IMF 신탁통치에 의한 빈곤의 세계 화이자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나뉘는 '20 대 80의 사회'가 한국에도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개도국 또는 선발개도국들 중 소득분배 구조가 가장 양호하다고 평가받아왔던 한국에도 정글 자본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⁴⁾

정리해고 때문에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정규직은 줄어들어 상용노동자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장에 남은 자에게도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조건은 악화되었다. 1998년 2월 제 1기 노사정위원회의 타협도 결국 정리해고를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고통분담이 구조와는 달리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정부는 제외된 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민중에게 고통이 전담된 꼴이다. 이에 비해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이 급증하고, 상장기업들은 1999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순익을 올렸다. 재벌들 간에도 상위 순위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중하위 순위 비중은 낮아지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자본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통분담이 형평성을 잃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냉소가 증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어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IMF 처방과 세계자본주의체제는 한국에서도 “자기가 숨겨놓은 덫에 스스로 단단히 걸려들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는 셈이다” (Martin and Schumann, 1996: 36).

둘째, 국부가 해외에 유출되고 있다. IMF체제 이후 1999년 5월까지 유출된 국부는 최소한 80조원에 이른다는 계산도 있다(노동일보, 1999). 부는 특히 미국 중심의 초국적자본에게 유출되고 있다. 외국의 산업자본은 국내기업을 헐값에 인수하거나 지분 확보를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의 민영화 및 외자도입 정책과 맞물려 포항제철과 같이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기업마저 외국인 지분이 급속히 늘고 있다. 아니 외국자본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아니면 거의 거들떠보지 않는다. 금융자본은 금융회사의 지분을 증대시키거나 인수하고 있다. 또 주식·채권·외환 등 자본시장에서 주가 급등과 환율 변동에 따라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

셋째, 위에서처럼 부가 유출되고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가속됨으로써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비판적 사회과학계에서도 독점은 강화되고 있으나 대외종속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 일순간에 무너졌다(김형기, 1994).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 종속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대응함으로써 종속을 심화시킨 것이다.

14) 정글 자본주의란 자본의 운동을 규제하는 시장외적 강제가 전무하여 사적 이익추구의 시장원리만이 유일한 법칙이 된 세계를 말한다. 마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나라하게 지배하는 비문명 세계인 정글과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장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IMF체제가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만큼 금융산업이 가장 큰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산업의 인수나 지분확대 외에도, 대안적 패러다임이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융산업이 된 만큼 경영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산업자본도 외자유치를 경쟁적으로 함으로써 종속이 심화되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연구직을 대거 방출함으로써 스스로 기반을 잠식해 왔다. 외환위기 탈출에 급급함으로써 장기적 전망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질적 전환을 위한 기술발전과는 반대로 기술종속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과거 남미의 종속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종속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임현진, 1997: 100-101).

2. 과 제

대안적 발전방향에서 논한 내외적 처방을 지향하되 우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투기(금융)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초국적자본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와는 반대로 내적 처방과 단기 과제에 급급하고 외적 처방과 중장기 과제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결과 앞의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생산적 복지론으로는 한계가 있다. 복지비 비율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부유출과 종속심화에도 대응이 요구된다. 그것은 구조개혁이 동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기는 내외적 요인과 단기·중장기적 요인이 결합된 탓이므로 처방도 내외적인 것과 단기·중장기적 측면들의 조화와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개혁이 제대로 달성된다. 그렇지만 때때로 상호 배타적이기도 한 위의 제차원들을 결합하고 통합하는 틀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다.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내외적 처방이 장기적으로는 수렴된다는 것이다. 이 선상에서 한국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 위기는 경제적 측면만의 위기가 아니다. 경제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총체적 위기이다. 그러므로 대응도 경제·정치·사회·문화 제측면이 결합된 것이어야 한다. 시장과 경제는 사회라는 틀 안에서 존재한다(Polany, 1944).¹⁵⁾ 사회일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기는 한국과 아시아 발

15) 투기자본 헤지 펀드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소로스가 시장근본주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얘기보다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그는 자본의 운동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의 본질을 잘 꿰뚫어 투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시장의 한계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시장보다 사회가 근본적이라는 폴라니의 글을 그가 애독하는 것도 이 점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중앙일보, 1998).

전모델의 시효소멸 탓일 뿐만 아니라 초국적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한계 탓도 크기 때문이다.

그 패러다임은 시장·국가·시민사회가 삼자정립되고, 환경과도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한국 상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시장에 기초하면서도 시장의 한계를 넘고, 환경친화적이고, 한국 특수성에 맞고, 세계적 보편성도 갖는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영미 자본주의는 시장과 자본주의의 한 유형일 뿐이다. 그것만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최배근, 1998: 13-29). 우리가 추구할 것은 현재의 한국 모델, 아시아 모델, 영미 모델을 뛰어넘는 모델이다. 그것은 지연된 전환의 과제와, 환경으로 대표되는 탈근대적 과제, 즉 이중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상황에 맞으면서 보편성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지적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서구의 모방이 아닌 한국 자신의 지적 기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넷째,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현재의 위기는 자본의 운동에 의한 위기이기 때문에 대응도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IMF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도 민중이니까 이들이 실천을 주도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민중들의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프랑스의 실업자운동, 태국의 빈민연대 등이 그것이다.

현정부는 내적, 단기적 처방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외적, 중장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넘어서는 운동이 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견인해야만 한다. 세계화, 초국적자본의 영향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제를 통제할 능력을 상당히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가장 강력한 단일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운동은 국가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자체가 또 다른 사회운동의 장이다(조희연, 1998: 393-419).

이상의 과제들이 실천될 때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예 따른 고통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 열매는 우리에게 좋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세, "IMF 위기, 한국 모델의 파탄, 그리고 새로운 모색," 한국정치연구회 엮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98.
- 강신준, "98년 중앙교섭의 정리와 과제," 「연대와 실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8년 7월 호.
- 강철규, "위기의 한국경제, 그 극복방안," 「당대비평」, 1998년 봄호.
- 공제욱,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재벌구조 개편," 「경제와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1998년 여름호.
- 김상조,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 「경제와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1998년 봄호.
- 김석근, "유교자본주의,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IMF: '세기말' 한국과 '철학의 빈곤'," 「전통과 현대」, 1999년 봄호.
- 김석준, "IMF체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재형성,"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심포지엄, 「IMF체제와 한국사회의 불평등」, 1999.
- 김용복, "일본: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지연과 확산'의 위기 구조,"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98.
- 김재훈, "IMF, 국제투기자본, 축적구조의 변화," 「경제와사회」, 1998년 여름호.
- 김형기, "한국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특질과 전망,"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 사회의 변동: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한울, 1994.
- 노동일보, 1999. 7. 12.
- 도진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당대비평」, 1998년 봄호.
- 박복영, "두 번의 국제금융위기: 1931년과 1997년," 「역사비평」, 1998년 봄호.
- 박사명,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정치 동학," 한국정치연구회 엮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한국정치연구회 엮음, 삼인, 1998.
- 손호철,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학: 한국의 'IMF 위기' 와 '동아시아 모델'," 「동아시아 발전 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98.
- 송주명, "일본의 APEC 정책, 1988-1996: 신중상주의적 지역주도," 「경제와사회」, 1998년 가을호.
- 이주희, "IMF 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초국적 자본이동과 한국 국가의 과제," 「경제와사회」, 1998년 여름호.
- 임영일, "노사관계 민주화의 조건과 전망: 노동운동 내부요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장집 임현진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나남출판, 1997.
- _____, "공황기의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 「연대와 실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8년 8월호.

- 임현진, “중속이론은 죽었는가?: 한국의 발전위기에 대한 해석,” 「경제와사회」, 1997년 겨울호.
- 장상환, “한국 자본주의, 왜 IMF시대를 맞았나,” 「역사비평」, 1998년 봄호(1998a).
- _____, “김대중정권 재벌정책 비판과 재벌해체론,” 「연대와 실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8년 8월호.
- 정상호, “재벌 체제와 좌절된 경제 개혁,” 한국정치연구회 엮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98.
- 정운찬, “한국경제, 거품의 붕괴와 제도개혁,” 「창작과비평」, 1998년 봄호.
- 정장연, “‘NIEs 현상’ 과 한국자본주의: 한국 선진국화의 실상과 허상,” 「창작과비평」, 1992년 가을호.
- 조희연,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997년 겨울호.
- _____,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비판 실천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당대, 1998. 중앙일보, 1998. 1. 26.
- 최배근, “유교자본주의(론)의 위기와 상상력의 빈곤,” 「경제와사회」, 1998년 가을호.
- Bello, W., “The End of the Asian Miracle,” *The Nation*, 1998 January 12/19(1998a).
- _____, *Dark Victory*, 「어두운 승리: 신자유주의, 그 파국의 드라마」, 삼인, 1998b.
- Bleifuss, Joel, “Building the Global Economy,” *In These Times*, 1998 January 11.
- Chossudovsky, Michel,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Impacts of IMF and World Bank Reforms*, 1997, 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 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 당대, 1998.
- Crawford, Robert, “Reinterpreting The Japanese Economic Miracle,” *Harvard Business Review*, 1998 January-February.
- Cumings, Bruce, “South Korea’s Challenge,” *In These Times*, 1998 February 22.
- Feldstein, Martin, “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1998 March/April.
- Fligstein, Neil, “Markets as Politics: A Political-Cultural Approach to Markets Institu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1996.
- Greider, William, *One World, Ready or Not: The Manic Logic of Global Capitalism*, A Touchstone Book, 1997.
- IMF, “The IMF’s Response to the Asian Crisis,” <http://www.imf.org/External/np/extr/facts/aisa.HTM>, 1998 April.
- Johnson, Chalmers, “Cold War Economics Melt Asia,” *The Nation*, 1998 February 23.
- Karliner, Joshua, “Grassroots Globalization,” <http://www.corpwatch.org/trac/globalization/roots/josh.html>, 1999.
- Kim, Dae Jung,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1994 November/December.
- Koppel, Bruce, “Fixing the Other Asia,” *Foreign Affairs*, 1998 January/February.
- Krugman, Paul,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1994 November/December.
- _____, “Asia: What Went Wrong,” *Fortune*, 1998 March 2.

- Martin, H. and H. Schumann, *Die Globalisierungsfalle*, 1996,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영림카디널, 1997.
- Nader, Ralph and Robert Weissman, "A Letter to Robert Rubin," *The Nation*, 1998 January 26.
- Piven, Frances Fox, "Is It Global Economics or Neo-Laissez-Faire?," *New Left Review*, No. 213, 1995.
- Polany, Karl,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1944, Beacon Paperback edition(1957).
- Radelet, Steven and Jeffrey Sachs, "Asia's Reemergence," *Foreign Affairs*, 1997 November/December.
- Rohwer, Jim, "The Dollar Rules," *Fortune*, 1997 November 24.
- _____, "Asia's meltdown: the risks are rising," *Fortune*, 1998 February 16.
- Sachs, Jeffrey, "The IMF and the Asian Flu," *American Prospect*, 1998 March/April.
- Smith, Patrick, "The Closed Shop," *The Nation*, 1997 November 24.
- Wade, Robert, "Japan, the World Bank, and the Art of Paradigm Maintenance: The East Asian Miracle in Political Perspective," *New Left Review*, No. 217, 1996.
- Wade, Robert and Frank Veneroso, "아시아위기: 고부채모델 대 월가-재무부-IMF복합체," *New Left Review*, 1998년 3·4월호, 강현석 번역, 「사회평론 길」, 1998년 7월호 (1998a).
- _____, "The Gathering World Slump and the Battle Over Capital Controls," *New Left Review*, No. 231, 1998b.
- Wallerstein, Immanuel et al., *Antisystemic Movement*, 1989, 송철순·천지현 옮김, 「반체제 운동」, 창작과비평사, 1994.